

# 이재명 대표 “주4일제 도입·단통법 폐지 추진”

사법리스크 공세 민생 카드 대응  
외교·안보 원로들 초청  
한반도 긴장 완화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민생·안보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비판하며 주4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속 폐지 등 통신비 경감 이슈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도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정부·여당을 ‘비토’하는 제1야당을 넘어 정부의 민생·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의 메시지가 ‘정치검찰 비판’ 쪽에만 쏠렸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라고 한 뒤로 이 대

표는 ‘언론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물론 사법 리스크 대응에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대표직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충성도 높은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정부·여당에 날을 세우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탓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과 정권이 총선 후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해 바퀴질 않

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며 “여권을 향한 강도 높은 대응을 자초하는 버튼을 누른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연일 정부·검찰과 대립하는 이런 모습이 중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특검과 검사 탄핵소추 등의 강공 일변도 행보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을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할 수 있는 탓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나경원 “계파 정치 결별” 친윤계 당대표 지원설 반박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제가 특정 계파에 줄 서거나 편승하는 정치를 했다면 5선 수도권 정치인의 자리에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는 오직 친(親) 국민, 친 대한민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지금껏 걸은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걸 제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고 저의 굳은 다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자신에 대한 당 대표 지원설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자신이 친윤계 지원을 받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항마’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인 일부 보도를 겨냥, “언론의 해석이나 추측의 자율성은 존중한다”면서 “다만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친한동훈)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 완전히 있고, 물어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당을 힘들게 했다. 패배 원인이었다. 보수 재집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리 당원과 국민께 실망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 끈끈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존중과 연대, 통합만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날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표 선거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 추천 권익위원 사의 김여사 의혹 종결처분 반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종목 비상임위원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 사의의 내용은 최근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은 한 언론에 ‘이번 일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된 최 위원의 임기는 오는 10월 까이다.

최 위원의 사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락하면 확정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 종료” 우원식, 여야에 최후통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시한은 6월 임시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은 공전 중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 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한 데 이어 여야 원내 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양측은 이날까지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 민주, 국회 상임위 출석 불응 장·차관에 실력행사 나섰다

### 처벌규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고발 절차·동행명령권 행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 단독의 상임위원회에 잇따라 불출석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질타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장·차관 등 국회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장·차관들의 국회 보이콧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 법무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과방위 역시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와 25일 현안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오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안질의의 입법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자의 불출석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위원장 권

한인 동행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법사위 내에서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말도 돌았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동행명령 주장은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